

어느 79세 청년의 죽음

광화문·부

박은주

부국장 겸 에디터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3월 7일 정오, 덕수궁 근처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노천 옥상에서 79세 남성이 분신을 했다. 기사에는 그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적힌 유인물을 뿌렸다고 쓰여 있었고, 악플이 어마어마했다. 그는 12일 후 사망했다.

지하철에서 정치 유튜브를 크게 틀어 놓는 그런 어른이었을까. 대체 왜. 수 소문 끝에 그의 동창 세 분을 만났다.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이 서로 ‘팩트체크’ 해가며 이야기를 들려줬다.

1946년생 K씨는 함흥에서 월남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경북고에는 남들보다 한 해 늦게 입학, 말쑥쟁이들에게 밥 사주고 타이르던 형 같은 동급 생이었다. 연세대 졸업 후 교사를 하다 제조업체를 차려 성공했다. 경기도 부천의 작은 교회 시무 장로로 은퇴할 때까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일으켰고, 서초동 자택 근처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비슷했다. 기부와 봉사, 배려의 일화가 계속 나왔다. 지난 3월 K는 무신론자인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내 소망은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라며 책을 보냈다. 제목이 ‘예수’였다.

유광중의 차이나 別曲 [342]

낙후한 사회의 첨단기술

글자 ‘옛 고(古)’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중국에서 대우가 아주 높다. 그러나 글자의 초기 풀은 사뭇 애매하다. 전쟁을 가리킨다는 설, 점괘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이 글자는 옛날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한자다.

중국인들은 과거의 사례로부터 가르침을 얻으려는 자세가 늘 충만하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성어가 대표적이다. 옛것을 배워 새로움을 만들자는 뜻이다. 비슷한 맥락의 단어가 의고(擬古)다. 과거 사례 등을 본뜬다는 말이다.

사고(師古)라는 단어도 있다. 지난 날의 케이스를 스승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옛 지식을 충분히 익혀 다가올 미래의 것을 알아간다는 취지의 온고지신(溫故知新)도 글자는 다르지만



맥락이 비슷하다. 지금보다 옛날이 좋다는 말도 자못 풍부하다.

사람들 마음 씩씩이가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인심불고(人心不古)라는 성어도 만들었다. 옛사람들이 보였던 도덕적 지향을 고도(古道)라고 적어 찬양과 경탄의 자세도 보인다. 고정불파(古井不波)도 잘 쓰이는 성어다.

‘오랜 우물에는 물결이 일지 않는

80년대 대학생들이 그랬다. 그들에게는 민주 투사, 열사 호칭이 붙었다. 70여 년 모범 시민으로 산 남성은 기사 속 익명어로 남을 뿐이다. 그의 주장이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우파적이고, 그가 청년이 아니고 노인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그의 바람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정치 공학을 아는 이들은 “보수가 깔끔하게 윤석열을 버렸으면 대선이 조금 더 유리해졌을 것”이라고, 시간을 끈 것은 ‘남비’라고 지적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거리의 주장 때문에 탄핵으로 가는 길에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 영장 청구권, 수사권, 헌재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가 돌아오고, 이재명 2심은 무죄가 나고, 윤석열은 돌아오지 못하는 결과를 그 많은 대중이 수용할 수 있었다.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던 K가 왜 꼭 그랬어야 하는지 아직도 친구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며칠 전 새벽 기도를 갔다가 부름을 받은 것 같다” “괴물 같은 한국 정치에 휩쓸리고 말았다”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종교를 지키려는 자발적 순교였다.”

분신 직전, K는 단톡방 몇 군데에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79세 K에게는 미래를, 공동체를 생각하는 청년의 마음, 그게 있었다. 그의 영혼이 안식처에 이르렀길 바란다.

다’는 뜻이다. 외부의 유인(誘因)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 등을 가리킨다고 한다. 이렇듯 중국에는 지난 것이 새로운 것에 비해 한결 더 낫다는 식의 사고와 행위가 가득하다.

그러나 옛것에 지나치게 과묵히 사리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 사례를 중국인들은 이고(泥古)라고 적는다. 진흙처럼 옛날 것에만 엉겨 붙어 새로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는 중국이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집권과 통제, 사상의 억압은 옛 왕조 그대로다. 외려 ‘법고’를 넘어 ‘이고’에 이르러 이젠 기술의 발달과 사회 수준의 불균형이 극심하다. 그 부조화는 끝내 어떤 사회를 만들까.

중국인문경영연구소 소장

社説

90일 번 관세 협상, 안보·경제 포괄 ‘트럼프 패키지’ 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발효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예 대상은 중국을 뺀 75국 전체다. 무차별 관세 폭탄으로 국제 무역 질서를 뒤집은 것도 놀랍지만 발효 후 24 시간도 안 돼 유예한 것도 놀랍다. 보복관세로 맞서는 중국에는 125%로 더 올렸다. 관세 전쟁의 주타깃이 중국임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 부재와 대선 정국이라는 최악의 조건에 있는 우리로선 일단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유예 시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지만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은 이미 시작됐다.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28분간 전화 통화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백악관은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를 우선시한다”면서 한국·일본과 우선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일본이 동맹이어서 협상 기회를 먼저 준다고 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동맹국 중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와 우선 협상해서 신속하게 정치적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유럽 연합(EU)은 회원국이 많아 협상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일본·베트남·대만 등은 이미 자국 관세 인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에 돌입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섭 테이블에 앉지만 경제·통상 협상만으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 트럼프는 한 권한대행과 통화 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조선·LNG·알래스카 투자 이슈와 함께 주한 미군 방위비 문제를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현안을 아우르는 ‘윈-윈 스톱 쇼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관세로 압박하면서 무역 흑자 축소,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등을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안보·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트럼프 패키지’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트럼프는 1기 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50억달러)을 요구했지만 결국 바이든 정부에서 13.9% 인상한 1조1800억 원대로 타결됐다. 지난 대선 유세 때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연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를 언급했다. 방위비는 차기 정부가 걸린 문제여서 한 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지만 일단 우리 측 카드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비관세 장벽 완화와 조선업 협력 방안, 수용 가능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 등 ‘트럼프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협상 팀을 구성하고 국회·정당과도 소통하며 거국적인 협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상호 관세 25% 철폐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를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언제든지 말 바꾸는 트럼프 특성상 서둘러 협상을 타결했다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장난감처럼 돼버린 국회 입법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이원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 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급입법은 헌법 원칙상 금지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넣었다. 문제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18일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헌재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박고 있다. ‘위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대통령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위헌 법률을 쏟아내려 한다.

민주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넣었는데, 이 역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축소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국회·법원·헌재 같은 헌법기관 관련 내용은 특정 정파가 국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헌재에 집착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재판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특정 정치인과 정당이 입법권을 마치 자신들의 장난감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국힘 주자들 ‘윤심’ 이용 움직임, 서로 자해 될 뻔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도 장관직 사퇴 직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나경원 의원도 1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원인이 돼 치른다. 그 결과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도 져야 하지만 누구보다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

이를 국민이 모를 리 없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0%는 국힘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했다. 27%는 국힘이 중립적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절차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다. 둘을 합치면 77%에 달한다. 16%만이 국힘이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서 떨어져 지속하고 국힘 정치인들은 일부 지지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일부 국힘 정치인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 눈앞의 당내 경선에서 작은 이익을 보려는 단진이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 대다수는 계엄에 따른 극심한 정치적 갈등, 국정 혼란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왔다. 국가적으로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와 안보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위기 극복을 위한 ‘끝내 타임’을 대통령 부재라는 조건 속에 사실상 허비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상황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윤심(尹心)’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 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이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대선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또 윤심 논란과 친윤·비윤 갈등이 벌어지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나. 그게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재명 패퇴시키는 유일한 길

한덕수-김문수 2인 3각에 《Yoon Again》 2030 접목
경선 1,2위가 후보-당권 연합 체제 구축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등의 조정 중재 융합력 기대한다



▲ 대한민국 77년사의 정통성과 가치를 계승하려는 게 《Yoon Again》을 외치는 2030 청년들의 요구다. 그들 위에 김문수-한덕수, 한덕수-김문수가 드림팀을 결성할 수는 없을까. © 뉴데일리

《김문수·한덕수 원팀》에 《Yoon Again》 가치 통합

가장 중요한 가치는 대한민국 77년의 정통성 계승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들 세 인사가 한 팀으로 뒤흔으면! 구국의 일념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패배하지 않았다. 그의 후심한 고난과 수난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승-발전시키려 했던 자유대한민국 《전국-근대화-선진화 77년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맥박은 오히려 더 역동적인 국민적 호응으로 뛰고 있다.

당당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의 메시지는 “누가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표할 후보인가?”를 결정자를 중요한 증거의 하나로 작동할 것이다.

국민 통합과 비(非) 좌파 대동단결

경선과 관련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는 《국민 통합》 또는 《비(非) 좌파의 대동단결》이다. 이처럼 《통합》의 미덕이 특별히 강조되는 데는 그만한 위기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통합》이란 것이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

파》의 《대동단결》까지도 말하는 것이라면, 그제 과연 가능한 것일까? 필요한 것이라 해도 될 일이라는 의문이다. 가치의 균열이 《무조건 통합》으로 꿰매질 수 있는가? 그럼 망하자는 소리냐고?

그건 물론 아니다. 다만, 《극좌가 주도한 탄핵에 두 번씩이나 가세한 부역 행위》와, 《이에 한사코 저항했던 행위》가 무슨 요술 방망이를 두드리면 똑딱하고 마지 《없었던 것》인 양 되돌려질지, 그 방법을 알 수 없다는 것뿐이다.

Yoon Again-김문수-한덕수 드림팀 결성

그러나 《탄핵 찬성파》도 《탄핵 반대파》도 투표로 승부를 가린 다음 그 결과에 다 같이 승복하자는 《통합》이라면, 그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에서 경선을 치른다고 할 때, 자유-보수-우파 진영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한 대행을 경선 후보부조에 《한 팀》으로 묶을 수는 없을 까? 한 대행이 정말로 움직인다고 할 때.

《김문수 선수》와 《한덕수 선수》는 서로 다른 유형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한 대행은 4월 8일 대법원 판사와 현재 판

사들 임명과 지명에서, 《김문수 선수》가 흔쾌히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 이전 한 대행의 그간의 궤적과는 사뭇 다른, 결연한 《반(反) 좌파적 모습》이었다.

국힘 당원들의 가치의식과 정치력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김문수 전 장관-한덕수 대행》은 얼마든지 한 팀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여기다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등 인사들까지 가세하면? 흥행이 되고, 대세가 생기고, 시너지가 일어나고, 축제가 될 것이다.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지네!

《후보-당권-총리》직 등을 놓고 《정치적 합의》를 도모할 수도 있다. 이전 정당한 정치 기예(技藝)다.

국민의힘 당원들, 《가치의식과 정치력》을 동시에 발휘하길! 자유대한민국이 그들에게 달렸다!

이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4월 9일 게재 되었습니다.

